현대북한연구, 5권 1호(2002년), © 2002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pp. 125~160

1960년대 북한의 위기와 군사화

김용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치학)

1. 머리말

1990년대, 한국전쟁 이후 최고 수준의 위기가 북한을 강타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경제 위기의 심화,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충격과 파장, 김일성 사망 등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이 위기상황을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 오늘 경제, 대외, 정치 부문 등의 상황은 1990년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더 이상 위기 심화 가능성은 약화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선택하고 있는 수단은 군대이다. 군을 앞세우는 전략, 즉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의 건설'로 대표되는 위기극복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선군정치[1]는 북한 지도부가 역사적으

1)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 "인

로 재생산된 군사화를 토대로, 1990년대 들어 심화된 위기상황에 대응해 체제의 생존과 안정, 나아가 강화를 위해 선택한 국가운영 방식[2]이다. 나아가 '선군의 영역'은 당과 대등한 수준에서 위기 돌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편 강성대국[3]은 현재의 위기관리체제에서 주민들에게 낙관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군사주의적 바탕 위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열망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군을 통한 위기돌파 전략이 오늘만의 현상인가? 본 논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사회를 이끌어 온 중요한 동력을 '군사화'로 본다. 한마디로 군사화는 '군대식 담론과 운영 논리 및 방식이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 구현되고, 이 과정에서 구축된 군대식 질서 안에 개인 및 집단의 의식과 행위 전반이 구조화되는 양상'[4]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군이 사회의 전면에 나서 직접 통치하는 제3세계나 비민주국가 등의 군사통치와는 다른 독특한 것이다.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건설기에서부터 사회주의 혁명과 그 건설에 이르는 과정 전반은 군사화라는 동력에 의해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즉 군사화는 항일무장투쟁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경험과 분단구조, 대외적

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노숙하고 현명한 정치로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로동신문』, 1998년 10월 19일.

2) 김용현, "북한 체제 군사화의 정치·사회적 기원 : 1990, 195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3권 1호(2001), 255쪽.

3)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를 앞둔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을 통해 공식 제기한 국가 전략목표의 하나이다.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로 규정되며, "사상과 정치, 군사의 강국일 뿐 아니라 경제의 대국으로, 통일된 조국으로서 무한대한 국력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 건설 논리로 구체화되었다. "정론 :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참조.

4)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3쪽.

환경 등의 배경 속에서, 정치권력의 유지·강화와 사회경제적 동원을 목적으로 지도부가 한국전쟁 이후 적극적으로 호명(呼名, interpellation)한 것이다.[5] 물론 그것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진전과 일시적인 후퇴의 과정을 보였다. 하지만 '총력전 태세'[6]로서 역사적인 축적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더욱이 혁명의 좌초 위기에 이른 오늘, 군사화는 국방위원회 체제 강화 등 부분적인 제도화 단계에 이르러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군사화와 관련하여 1960년대를 주목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1990년대적 현상'이 '1960년대적 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위기 수준이 매우 높았던 때였다. 북방삼각동맹이 균열되고 남방삼각동맹이 성립되었으며[7], 정치적으로 수령제가 성립되는 시점이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1950년대 극단적인 노동력 중심 산업화 전략의 후유증과 피로현상이 점증하는 시점이었다. 북한은 이 위기를 군사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현상은 만주파 군대의 제도화 및 당·군의 일체, 경제국방 병진 노선 및 4대 군사노선 등이었다. 위기극복 수단이 정치 영역에서 군인들의 동원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포함한 일상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군부 강경파 사건은 사회 전반을 압박했던 위기의 해소방법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에서 불거진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5) 위의 글, 26~139쪽 참조.

6)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체제 전반을 총력전 태세로 보는 입장은 和田春樹, 『歷史としての社會主義』(東京 : 岩波書店, 1992) ; 오쿠무라 사토시(奧村 哲), 박선영 옮김,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 전쟁과 사회주의의 변주곡』(서울 : 소나무, 2001) 참조.

7) 자세한 내용은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 법문사, 1985) 참조.

2. 군사화의 대두

1) '북방삼각동맹'의 균열과 '남방삼각동맹'의 성립

1960년대 대외적 조건은 북한을 군사화로 치닫게 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북·소·중 북방삼각동맹의 균열과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강화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중소 갈등의 와중에서 이들 국가들과 겪은 갈등은 심각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본가 사이의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북한은 이들과 '의도하지 않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반면 한일간의 국교정상화와 역내 경제 통합, 그리고 월남전 등을 거치면서 남방삼각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감지한 피포위의식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긴장 또한 분단구조를 강력하게 포박해 북한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1960년대 들어 북소, 북중 관계는 심각한 균열상태에 빠져들었다. 북소관계의 균열은 흐루시초프 등장 이후 스탈린 격하운동에 대한 북한에서의 파장과 쿠바 사태에 대한 소련의 수동적 대응 등이 핵심적인 소재로 작용했다. 한편 북중관계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 혁명전통과 후계자 문제 등과 관련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중소 간 심각한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수동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자주노선으로 취했다.

북소 간 분열의 싹은 1956년 2월 소련 제20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개인숭배 비판과 집단지도원칙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 대회 이후 소련계를 중심으로 평화공존론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일성으로의 권력 집중에 대한 반발로서 당내 민주주의와 집체적 지도 등

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타났다.[8] 그러나 평화공존 문제는 한국전쟁 직후 반미의식이 극을 달하던 북한의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숭배 비판 문제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현상이 싹트고 있던 상황이었다. 1956년 3월 로동당 3차 대회 직전 열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개인숭배 현상이 인정되었지만, 3차 당대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한 소련계와 연안계 중심의 김일성 비판 인사들의 불만과 불안감의 표현이 '8월종파사건'[9]으로 나타났다.

소련의 경제건설 방식의 변화, 즉 스탈린식 중공업 노선에서 경공업 중심 노선으로의 변화도 양국간 갈등의 쟁점 중 하나였다. 소련은 이같은 경제건설 방식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북한에도 적용시키려 했다. 하지만 북한은 1953년 8월 전원회의 이후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다. 소련계와 연안계는 소련의 입장을 북한 내에 전파하는 전달자로 기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만주파 주류와 마찰을 빚었다. '8월종파사건'의 또 다른 차원의 배경에는 경제 발전 노선을 둘러싼 내외적

8) 당시 소련은 소련계를 통해 평화공존문제에 대해 북한에 압력을 가했다. 김일성은 "1954~1955년경에 어떤 나라 사람들은 최종학을 통하여 인민군대 신문에서 '미국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를 없애자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구호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소련의 압력을 말하면서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김일성, "인민군대 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 9. 8.)", 『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377쪽.

9) 8월종파사건에 대한 정치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 역사비평사, 1995), 275~284쪽 ;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 : 東京大學大學院總合文化研究科 國際關係論專攻 博士學位論文, 1995), pp.310~326. 사건의 군내 파장에 대한 분석은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85~91쪽. 경제적 관점에서 축적의 위기로 본 분석은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196~203쪽 ;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22~49쪽.

갈등이 내재된 것이었다.

북소 간 갈등의 결정적인 악화는 1962년 '쿠바 사태'[10]에서 비롯되었다. 흐루시초프의 일방적인 대미 양보가 굴복으로 비춰지면서, '군사적 우산'으로서의 소련에 대한 북한의 사고는 재조정되기 시작했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급격히 고양되면서 북한은 곧바로 '4대 군사노선'을 선언했다.

한편 중국과의 갈등은 1964년 '통킹만 사건' 이후 베트남전 확전에 대한 견해차, 1960년대 중반 문화혁명과 소련의 흐루시초프 실각 및 신지도부 등장 등의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베트남전 문제는 19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11]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보고에 나선 김일성은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중소분쟁과 베트남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교조주의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고, 베트남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단결과 지원병 파견을 촉구했다.[12]

당대표자회 직후부터 북중 간 갈등은 지상으로 터져 나왔다. 1967년 1월부터 문화혁명의 전위대인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와 같은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고, 허위로 북한에서 '정변'이 발생했음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지도부는 해명성명을 발표하고, 군에 대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13] 나아가 전사회적으로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

10) 정진위, 『북방삼각관계－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 87～89쪽 참조.

11) 1966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연린 2차 대표자회는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대외정세에 대처하고 국방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답보상태에 빠진 '7개년 계획' 목표의 달성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제정세, 경제 문제, 통일문제 등 세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회의였다. 이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은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 10. 5.),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76～469쪽 참조.

12) 위의 글, 377～414쪽 ;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13) 중앙통신사의 당시 성명은 북중 간의 갈등관계를 직접 언급한 유일한 공식문건이었

력 강화가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내적 단결의 정점으로서 수령의 역할과 사회주의 건설의 독자적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 더욱 더 강조되었다. 바로 이같은 움직임 속에서 북한 사회는 개인숭배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 갔다.[14]

이와 같은 북방삼각동맹의 균열에 반해 남한·미국·일본의 남방삼각동맹의 성립은 북한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정치·군사적 압력으로 다가왔다. 1961년 남한 군사쿠데타 정권의 등장과 한미 동맹의 강화, 1965년 한일협정[15] 등을 통한 한미일 삼각동맹의 성립은 북한의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의 확전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1961년 소련 및 중국과 각각 군사동맹관계를 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조약들의 체결로 대응했다.[16] 이 조약들은 쌍방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상호원조조약이었으며, 외형적으로 북방삼각동맹은 공고한 듯이 보였다. 하지만 이 동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형적인 공고함에 비해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재해 있었다.[17] 이제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다. 그 내용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각지의 홍위병 신문, 벽보 및 삐라들에서는 마치도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정변'이 일어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 불안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듯한 허위선전이 진행되고 있다. …… 오늘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철석같이 통일되여 있다.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대는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단결되여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신사의 성명", 『로동신문』, 1967년 1월 27일.

14)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299~300쪽.

15) 한일협정과 관련한 북한의 당시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이종석, "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 봄호(1995), 57~69쪽 참조.

16) 1961년 7월 6일, 11일 북소, 북중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중앙연감 1962』(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2), 157~162쪽 참조.

17)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에 내몰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의 '국방·경제 병진 노선'과 '4대 군사노선' 채택 등의 흐름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의 반영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부의 국방력 강화와 강력한 전사회적인 군사화로 나타났다.

2) 군내 정치사업의 변화와 만주파 군대의 제도화

'8월종파사건'을 통해 당과 정치 부문이 만주파 중심으로 재편되고, 군내 숙청을 통해 군의 핵심도 대부분 만주파가 장악하게 되었다.[18] 동시에 만주파는 군내 정치사업에서 소련으로부터의 탈색을 의미하는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항일무장투쟁 전통으로 대체했다. 만주파가 장악한 당을 통한 군 통제도 진행시켰다. 그것의 제도적인 표현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의 설치였다.

군에 대한 정치사업은 단계적으로 크게 교조주의 비판, 즉 소련식 군사부문에 대한 비판과 공산주의 정치사상교양의 강화, 그리고 항일무장투쟁 전통 강조 등으로 진행되었다.[19] 김일성은 '부대의 조직편제, 훈련, 군사전법과 관련한 문제는 자기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고, 북한의 특수성을 살려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군인들에 대한 정치교양에서도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는 안 되며 …… 모든 전사들과 군인들을 사회주의적

박사학위논문, 2001), 77~78쪽.

18) 자세한 내용은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85~91쪽 참조.

19)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pp.501~503.

애국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지시했다.[20]

군내 정치사상교양의 강화는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 추진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당의 무장력'인 군은 '사회주의 전취물'을 지키며, '인민들의 창조적 노동을 철옹성 같이 보위'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로 교양되었다. 아울러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장병들이 "자기 머리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으로 교양되었다.[21] 또한 1960년부터는 군대를 '군인들을 정치적으로 단련하는 공산주의 학교'로 유도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붉은기중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모범중대운동'[22]을 한 단계 높여 공산주의 교양을 위주로 하는 운동이었으며, '붉은기중대'의 판정 조건은 '천리마작업반' 판정 조건과 유사했다.[23] 당시 '붉은기중대운동'은 전 사회적인 대중 경쟁 운동으로 확산되던 '천리마운동'의 군대식 형태였다.

마지막으로 항일무장투쟁이 군내 '혁명' 전통으로 승격되어 교조적인 소련식 전통을 대체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군의 전통을 뛰어넘어 전 사회적인 혁명전통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은 "누가 하고 몇 사람이 했든지간에 그들의 투지, 사상 정신이 중요한 것"이며,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것의 사상체계와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계승"[24]하

---

20) 김일성,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 3. 8.),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74~178쪽.

21) 김일성, "군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58. 10. 30.)",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566~567쪽.

22) 한국전쟁 때 시작된 부대간 경쟁 포상제도로서 군사 부문에 국한된 군내 대중운동이었다.

23)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 학교이다(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1960. 8. 25.)", 『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65~283쪽.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는 1958년을 기점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소련계로서 포병사령관이었던 김봉률조차 인민군의 창군이념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못박고, 소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25] 이는 항일무장투쟁이 군내에 전일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군 정치사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군에 대한 만주파의 통제와 관련한 제도적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미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개정 당규약은 최초로 군내 정치기관의 조직을 규정한 바 있다. 당규약 38조는 "당중앙위원회는 당적 지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특수한 기관 내에 정치국을 조직"하며,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의 직접 지도를 받으며 자기사업 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당중앙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최초로 삽입시켰다.[26] 이때 정치국이 설치된 기관은 민족보위성, 내무성, 교통성 등이었으며, 군에 대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8월종파사건'을 거치면서 김일성은 당을 통한 직접적인 군장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총정치국의 인적 자원 교체와 아울러 실질적인 당의 정치적 지도가 관철되는 기구가 요구되었다. 그 제도적 표현이 1958년 3월 군내 당사업의 집체적 지도기관인 '인민군당위원회'의 설치였다. 김일성은 군내 당사업이 총정치국의 유일적인 지도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두 가지 결함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부가 웃기관에만 매여

24)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2. 8.),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65쪽 ; 김일성, "군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58. 10. 30.), 575쪽.

25) 김봉률,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원수 항일빨치산의 혁명적 애국전통을 계승한 군대", 『민주조선』, 1958년 1월 24일.

26) "조선 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국토통일원 편,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0), 532쪽.

있고 집체적 지도와 통제 밑에 있지 않는 것"과 "군관당원들을 당조직 생활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킬 수 있도록 당조직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민군 당위원회'의 설치를 강조했다.[27]

인민군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하고, 군단과 사단 및 연대에도 각각 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대대에는 초급당위원회, 중대에는 초급당단체를 각각 설치하도록 조치되었다. 인민군당위원회의 성원으로는 집단군, 군단, 총정치국의 정치간부와 군사간부가 망라되며, 군내 모든 간부가 당위원회 소속으로 당의 통제하에 들어가도록 되었다. 따라서 총정치국장의 활동도 인민군당위원회의 토의와 결정을 집행하는 의무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군내 각급 당위원회도 이에 준하게 되었으며, 간부들의 당생활 통제와 군사간부에 대한 당의 통제도 이 위원회의 임무가 되었다.[28]

인민군당위원회는 기존의 소련식 '군사단일제'와 중국식 '정치위원제'를 폐기하고, 당명령계통과 군사명령계통을 이원화하여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가 명령계통의 혼란과 규율을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1960년도에 들어서는 정착하기 시작했다.[29] 사회에서는 이 무렵에 이르러서야 농촌에 '청산리방법'이, 공장에 '대안의 사업체계' 등 당위원회에 의한 일원적 통제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군에 대한 당위원회의 통제방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사회에도 유사한 방식의 당통제 방법이 시행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면 당의 통제가 군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강화됐다는 점은 같은

27) 김일성,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 3. 8.), 164~166쪽.

28) 위의 글, 166~169쪽.

29)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p.499.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제의 일원화와 달리 군내에서는 오히려 이원화를 통해 당을 통제했다. 이는 만주파의 군 장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군에 대한 통제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군내에서 당위원회 제도의 실험을 통해 사회에서도 당의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의 바탕 하에서 김일성은 1960년 9월 당과 군의 관계를 재규정했다. 김일성은 군을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의 군사적 군중조직"이자, "다른 모든 군중조직과 마찬가지로 군대도 역시 당의 령도밑에서만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군대는 "당이 조직한 것이고 당의 정책을 집행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력"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인민군대의 최고조직은 당위원회"이며, 군사·정치문제 모두 당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군내 각급 당위원회는 '집단적인 군사정치적 령도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군사지휘관과 정치지휘관은 당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명령·집행하는 기능적인 역할의 수행자로 약화되었다.[30]

3) 당·군 일체와 정치의 군사화

소련계와 연안계의 숙청을 통한 만주파의 군 장악 과정은 1958년 3월

30)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와 군당위원회를 비교하면서 민족보위상은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 총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일성, "인민군대 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 9. 8.), 350~352쪽. 한편 군사 부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로동당군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1962년 12월 조선로동당 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였다.

월부터 1959년 말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과 사회 분야보다 군내 숙청이 철저했으며, 그만큼 만주파의 군 장악도 치밀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군내 주요 보직은 완전히 만주파가 차지했다. 또한 이들이 대거 당중앙위원회에 진출함으로써 당과 군은 만주파 일색으로 변화했다.

소련계와 연안계에 대한 숙청작업이 처음부터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숙청이 본격화한 1958년 초까지 군내 이들의 비중도 상당한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958년 인민군 창건 10주년을 맞이하여 1월 21일과 2월 5일의 '국기훈장' 수여자 명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먼저 1월 21일의 '국기훈장' 수여자는 군수뇌부 '장령', 즉 장성들이었다. 또한 2월 5일의 '국기훈장' 1, 2, 3급 수여자는 장령과 '군관'들이었다.

<표 1>과 <표 2>는 숙청 직전 북한 군 수뇌부의 인적 구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장령급 국기훈장 수여자의 분포를 보면 당시 군 수뇌부가 어느 일방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군관'의 경우는 만주파 군관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군내 헤게모니는 만주파 수중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대대적인 군내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 이후 정치적인 생존을 유지한 인사는 소련계 방학세와 김봉률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는 군내 숙청이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또한 만주파의 군 장악이 얼마나 확실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제 군 수뇌부는 완전히 만주파만으로 구성되었으며, 군내 요직도 만주파 내부의 자리바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 결과는 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 대회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정치적 격동을 최종 마무리하는 행사였으며,

<표 1> 국기훈장 1급 '장령' 계·파별 수여자 명단(1958년 1월 21일)

계파	수 여 자	비고
만주파	김광협, 최현, 류경수, 최용진, 지병학, 정병갑, 김창봉, 김대홍, 최광, 허봉학, 오진우, 전문섭	12명
연안계	리권무, 리림, 리방남, 전우, 김창덕, 박창림	6명
소련계	최종학, 김봉률, 김철우, 김학천, 한일무, 유성철, 정학준	7명

자료 : 『로동신문』, 1958년 2월 6일 ;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1945~1961", pp.506~507쪽 ;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0)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6).

<표 2> 국기훈장 계·파별 '장령' 및 '군관' 1, 2, 3급 수여자 명단(1958년 2월 5일)

국기훈장	계파	훈장 수여자	비고
1급	만주파	김철만, 최민철	2명
	만주파 군관	김성국, 김양춘, 리두익, 리재운, 임 철, 유창권, 김충렬, 전문욱	8명
	연안계	김 홍, 왕 련	2명
	소련계	리동화, 리종인, 박길남, 최홍극, 최용한	6명
	불 명	리덕원, 최봉록	2명
2급	연안계	강병찬, 최봉준, 리철용	3명
	소련계	김일, 김태건, 천룔, 천이환, 김단	5명
	불 명	김용점, 석중국, 지익겸, 강범모, 김광순, 리성근, 리성실, 문 철, 백락철, 정 범, 조사송, 한명욱, 현학봉, 허민국, 윤상렬	15명
3급	연안계	허 섭	1명
	한국군계	강태무	1명
	불 명	김기원, 김봉문, 리용수	3명

자료 : 『로동신문』, 1958년 2월 8일 ;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pp.506~507 ;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0)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6).

<표 3>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 계파별 분포

계파		중앙위원(직책)	비 고
만주파	정치인	김일성, 최용건, 김 일, 최 현, 석 산, 김경석, 최용진, 박성철, 이영호, 전창철, 안 영, 김동규, 박영순, 김병식, 김옥순, 임 철	16명
	군 인	김광협(내각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서철(제13사단장→군사정전위원회 대표), 김창봉(총참모장), 허봉학(총정치국장), 오진우(제1집단군 사령관), 전문섭(제2집단군 사령관), 최광(제1집단군 참모장), 한익수(민족보위성 부상), 김대홍(군사대학교장), 최기철(내무성 정치국장), 오백룡(내무부상 겸 호위총국장), 최민철(제4군단장), 김좌혁(군정찰국 부국장), 지병학(제2군단장)	14명
갑산계		박금철, 이효순, 이송운, 허학송, 김왈룡, 허석선	6명
연안계		김창만, 하앙천, 김창덕	3명
소련계		남 일	1명
국내계		박정애, 정일룡, 이종옥, 이주연, 한상두, 정준택, 한설야, 강진건, 최원택, 백남운, 김만금, 박문규, 김회일	13명
기타, 불명		김영주 외	32명

자료 : 『로동신문』, 1961년 9월 19일 ; 와다 하루키,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2), 312쪽 ;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pp.507~508, 596~597 ;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0) ; 강만길 ·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6).

그 주인공은 만주파 일색이었다. 이 대회에서 만주파는 중앙위원회 위원 85명 중 30명, 후보위원 50명 중 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중앙위원 중 연안계는 3명, 소련계는 1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만주파가 중앙위원회를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당을 일원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과 같이 제4차 당대회 중앙위원들의 계 · 파별 분포를 보면 정치권력이 완전히 만주파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중앙위원에 선출된 군인들이다. 당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선출된 현역 군인의 전원이 만주파였다.[31] 이는 조선

31) 후보위원 중 현역 군인은 유창권(민족보위성 부상 겸 해군사령관), 태병렬(당중앙위원회 부부장 : 소장), 정병갑(제3군단장), 박우섭(군단장), 백학림(제5사단장) 등 5명이며 이들은 모두 만주파이다.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pp. 507~508.

인민군이 완전한 만주파의 군대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 만주파 중앙위원 3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현역 군인이었다. 또 만주파 정치인 중앙위원 중 절반은 군부에서 정치 분야로 활동 영역을 이전한 인사들이었다.[32] 이는 군의 '만주파화'와 당중앙위원회의 '만주파화'를 넘어 '당과 군의 일체화'였다. 이후 역대 민족보위상 및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전원이 만주파로 채워지고, 1960년대에 설치된 당 군사위원회도 전원 이들로 구성되었다.[33]

3.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등장과 실패

1)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배경과 내용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우선 사회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로 제기되었다. 김일성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파괴될 것이라 하여 국방건설에만

32) 만주파 정치인 중앙위원 중 최용건(민족보위상), 김일(민족보위성 부상), 최현(민족보위상), 석산(민족보위성 부상), 김경석(사단 정치부 지휘관), 최용진(민족보위성 부상), 박성철(사단장), 이영호(민족보위성 부상 겸 해군사령관) 등은 군 지휘부를 경험한 인사들이었다.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0) 참조.

33) 역대 민족보위상 및 1972년 12월부터 개칭된 인민무력부장은 최용건(1948.9~1957.9), 김광협(1957.9~1962.10), 김창봉(1962.10~1968.12), 최현(1968.12~1976.5), 오진우(1976.5~1995.2), 최광(1995.10~1997.2) 등 전원이 만주파였다. 2001년 현재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해군 직업군인 출신이다.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최종학 숙청 이후 김태근, 허봉학, 오진우, 조명록 등이었다. 인민군 총참모장은 연안계 리권무 숙청 이후 김창봉(1959.7~1962.10), 최광(1962.10~1969.2), 오진우(1969.2~1979.9), 오극렬(1979.9~1988.2), 최광(1988.2~1995.10), 김영춘(1995.10~현재) 등으로 이어졌다.

치우치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혀 경제건설에만 치우치고 국방력을 충분히 강화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나라의 정치적 역량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물질적 기초이며 국방건설은 경제건설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성과를 튼튼히 보위하는 중요한 담보"라고 강조했다.[34]

다음으로 북한을 둘러싼 '대외정세의 합법칙적 요구'라는 것이었다. 1960년대 초 한반도 차원의 긴장과 사회주의권의 분열이 북한의 위기감을 극대화시켰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미국의 침략' 강화와 '전쟁 확대 음모의 노골화', 그리고 남한의 월남전 가담 등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였으며 … 조성된 정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방건설을 더욱 강력히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하자면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국방에 돌려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정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병진 노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35] 김일성의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처한 전반적인 위기상황에서 병진 노선만이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유일한 방안이었다.

사실 경제·국방 병진 노선 채택의 대외적 배경은 중소 갈등과 북소 간 균열 속에서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출발이라는 위기의식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또한 남한에서의 군사쿠데타 이후 한반도 차원의 긴장 심화와 쿠바 사태, 월남전 등 세계적 차원의 긴장 심화가 중첩되면서 북한의 위기의식을 강하게 부추겼다.[36] 1960년대 초반 대외적인 위기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이다.

---

34)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 10. 5.), 415~416쪽.

35) 위의 글, 418쪽.

36) 이에 대해 북한이 느낀 위기의식은 위의 글, 448~456쪽 참조.

하지만 이같은 대외적 배경 속에서 병진 노선 채택의 대내적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당과 군의 일체화를 이룬 만주파의 물적, 그리고 군사적 재생산구조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는 거대한 정치·군사적 헤게모니 집단으로 성장한 만주파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의 관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주파 출신의 지도자들은 체질적으로 군의 강화에 관심이 컸다. '8월 종파사건'과 연안계 및 소련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이후 만주파 중심의 당·군 일체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군사력 강화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세력은 그 존재 기반을 상실했다. 이 상태에서 북한 지도부가 대외적인 위협 요인의 등장을 계기로 자기 재생산의 물적·군사적 기반을 확고히 한 것이다.

외연적 산업화 전략의 정체현상도 병진 노선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외부 위협의 심화와 내부의 경제·사회적 정체현상의 만연을 가져왔다. 북한의 외연적 산업화 전략은 그 특성상 노동동원의 일상화, 위로부터의 억압과 동원을 동반했다. 북한의 산업화 전략에서 중요한 특징은 생산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생산에의 투입 확대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다. 이는 숙련된 노동자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를, 더 좋은 기계보다는 더 많은 기계 및 원자재를 산업체계에 투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37]

이와 같은 외연적 성장전략은 기술 축적과 발달된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포적 성장전략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그 성장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북한에서는 노동력 동원의 극대화를 위한 군대식 경제, 군대식 사회가 보다 효율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견인차였다. 하지만 이 전략이 내포적 산업화로 전환

37) 차문석,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 : 소련·중국·북한의 생산성의 정치"(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84~86쪽.

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북한 사회의 정체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병진 노선을 통해 사회적 위기의식 속에서 정치·사상적 일체감을 다시 한번 조이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 결과 병진 노선은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사상사업의 강화로, 사회적 측면에서 증산·절약 운동의 강조로 나타났다.

2) 국방비의 증가와 병진 노선의 실패

병진 노선은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희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비록 '병진' 정책이 표방되었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에서 기존의 소련제 무기체계를 자력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비생산적인 무기 생산이 경제에 주는 파급효과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로의 자원의 우선 및 집중 투입은 '생산활동' 분야로의 자원투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건설과 군사력 증강의 '병진'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먼저 정치적인, 즉 정치사상사업의 강조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며 혁명기지를 강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단결시키는 것, 즉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38] 이 정치사상사업의 강조는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 확고한 계급의식과 열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하는 것, 전쟁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수정주의에 대해 투쟁하는 것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38)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 10. 5.), 428쪽.

<표 4> 국방비 지출 추계(1956~1964년)

(단위 : 백만 원)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공식 국방비	56.40	54.19	63.43	61.09	61.00	58.45	111.88	57.54	249.53
비공식 국방비	166.57	172.39	218.03	263.03	293.03	425.61	489.21	547.83	575.67
총 국방비	222.98	226.58	282.03	324.12	324.12	484.05	601.08	605.36	825.20
공식 국방비/예산(%)	5.9	5.3	4.8	3.7	3.7	2.5	4.1	1.9	7.3
총 국방비/예산(%)	23.3	22.2	21.3	19.6	19.6	20.7	21.6	20.0	24.1

출처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 Kaleckian CGE 모델 분석"(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53쪽.

했다. 그리고 북한은 증산과 절약에 대한 강조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가 병진 노선이 파생시키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여기서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당시 국방비 문제를 살펴보자. 북한의 국방비는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전체 예산항목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규모만으로 전체 국방비를 추정할 수도 없다. 공식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다른 예산항목에 은닉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가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5차 당대회에서 김일의 발표였다. 당시 내각 제1부수상 김일은 "1960년에 국방 부문에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9%가 돌려졌다면 당대표자회의가 있은 이후인 1967~1969년 동안에는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31.1%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돌려졌으며 지난 9년 동안에 거의 8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국방건설에 지출"되었다고 보고했다.[39]

39)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6개년(1971~1976) 계획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114쪽.

40)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 Kaleckian CGE 모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 시작되는 1962년 이전에도 이미 전체 국가예산 19%대의 대규모 국방비가 지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60년도의 공식 국방비가 총예산의 3.1%였다는 점에서 실제 국방비는 6배 정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60년도의 국방비는 총예산의 19%인 374백만 원이다. 1961~1969년간 국방비로 80억 원을 투입했다는 것은 1967~1969년간 총예산 대비 국방비가 31.3%인 점을 감안하면 1961~1966년간 각 연도 총예산의 19.8%를 차지한 셈이었다.[40]

<표 4>를 보면 북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의 비중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방비에 비해 3~10배 이상 차지했다. 경제 침체상황에 빠져드는 당시의 상황에서 20% 내외의 국방비 투여는 북한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었다. 그리고 병진 노선의 채택과 동시에 진행된 4대 군사노선은 전혀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비경제적 조치였다.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노선은 엄청난 물적 비용을 담보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 동원이라는 인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는 곧바로 경제건설 과정에 반영되었다. 북한은 1961년부터 1967년까지를 기간으로 한 '7개년 계획'[41]에 착수했다. 그 이전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완수될 정도로 고속 성

토통일원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114쪽.

40)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 Kaleckian CGE 모델 분석"(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152쪽.

41) 7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공·농업국에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중공업 위주의 발전을 기초로 하되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기술혁신과 문화혁명 및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주요 과업으로 4차 당대회에서 제기되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국토통일원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0), 41~43쪽.

장이 이루어졌다.[42] '7개년 계획'시기는 북한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 동안의 외연적 발전전략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시정하고, 내포적 전략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시켜야만 하는 성장의 분기점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관계의 악화와 국방비 부담의 증가, 중공업 우선노선의 지속은 '7개년 계획'을 지체시키고 구조적 불균형과 문제를 확대재생산시키는 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이 계획은 1970년까지 3년간 연장된 뒤에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43]

4. 군부 강경파 사건과 체제의 군사화

1) 격동의 정치 : '1967년 사건'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제2의 전쟁 발발의 위기의식이 심화하는 와중에 '8월종파사건' 이후 최대의 정치적 격변이 발생했다. 당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계 박금철, 이효순 등이 숙청된 이 사건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성에 대한 범만주파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은 격렬한 정치사상투쟁이었으며, 이후 북한에서 정치적 이견 세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

42) 高瀨淨, 이남현 옮김, 『북한 경제입문』(서울 : 청년사, 1988), 245～250쪽 ; 高昇孝, 『現代朝鮮經濟入門』(東京 : 新泉社, 1989) ; 高昇孝, 이태섭 옮김, 『현대북한 경제 입문』(서울 : 대동, 1993), 119～123쪽 참조.

43)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광주 : 광주, 1988), 100～104쪽.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북한 사회는 급격히 군사화, 동원체제화로 전환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전체 사회에서 고조되었으며, 구조화되어 갔다.[44] '1967년 사건'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심각한 당내 숙청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67년 5월 비공개회의였던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숙청 대상자는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 수립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당의 조직·사상·문화·대남 분야 담당자들이었다. 대부분 '조국광복회'[45] 관련 갑산계와 소련 유학파 인사들이었다.

당시 정치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비서로서 사상문화 분야를 담당해 온 박금철, 당 과학교육부장 허석선, 정치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비서로서 대남공작 총책으로 활동해 온 이효순, 평양시당위원장 이송운, 직업총동맹 위원장 김왈룡 등 조국광복회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소련 유학파인 당 사상담당 비서 김도만, 내각 부수상 고혁 등이 비판받았다.

당시 이들에 대한 숙청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방해하였으며 당 안에 부르죠아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 유교 사상,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같은 온갖 반당반혁명적 사상을 퍼뜨려 우리 당과 인민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고 책동"한 것이 이유가 되었다.[46] 하지만 보다 직접적

---

44)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것은 첫째, 수령의 지도력 찬양과 수령 중심의 단결 및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조, 둘째, 수령 가계의 혁명화·신화화, 셋째, 대중에게 요구된 개인숭배 행위를 능동적인 사회의식과 사회적 담화로 제도화시키는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300~303쪽.

45) 조선광복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을천, "장백혁명근거지에서의 조국광복회 활동(1936.5~1940.8)", 『력사과학』, 제5권(1961)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1925~40) :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동향과 통일과정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427~457쪽 참조.

인 이유는 이들이 김일성의 유일지도성과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훼손시켰기 때문이었다.[47] 김일성은 4기 15차 전원회의 직전 "자강도와 평안북도 같은 데서는 어느 부수상의 지시를 학습하고 있다고 하며 또 어떤 데서는 중앙당 어느 부장의 '교시'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는 옳지 않은 현상들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48]

1967년 사건을 통해 북한 지도부는 항일혁명전통과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걸림돌이 되는 비판세력을 제거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북중 갈등의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수령의 유일지도성에 반하는 분열적 요소에 대한 일소작업이었다. 하지만 외부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전체 사회의 획일적인 통제와 '수령'이라는 1인 통치로의 길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비판세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유일지도에 반하는 비판은 있을 수 없었으며,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을 통해 김정일로의 후계체제의 싹이 발아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역동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49]

---

46)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제2권, 1979년판(서울 : 돌베개, 1989), 217쪽.

47) 자세한 내용은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305~309쪽.

48)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도, 시, 군 및 공장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 3. 17~24.), 『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39~140쪽.

49) 김정일의 1967년 저작들은 그가 이 숙청을 주도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참조.

2) '군부 강경파' 사건과 수령의 군대

'군부 강경파 사건'은 1968년 말부터 1969년 초까지 진행된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사건이었다. 민족보위상 김창봉,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 군 최고수뇌부 다수가 숙청되었다. 이 사건은 대내적으로는 극단적인 개인숭배와 계속되는 동원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현상'이,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분열과 남북관계의 팽팽한 긴장상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내 권력구조상 중대변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 극좌적 군사모험주의의 예봉이 꺾이는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1960년대 후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팽팽한 긴장상태에 빠졌던 시기였다. 이때 북한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고도의 동원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군사문화가 사회문화 양식을 억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전체 사회가 짓누르는 대내외적 위기의식에 포박되어, 극도의 피로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군사모험주의가 대두되었다.

군사모험주의는 극단적인 도발 형태로 나타났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사건'과 이틀 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50] 그리고 11월의 '울진·삼척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남북, 북미 관계는 전쟁 직전 상태까지 갈 정도로 악화되었다.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북한 내부에도 엄청난 부담과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과도한 국방 분야로의 역량 집중과 주민 생활 및 동원의

50)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앞바다에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 초계정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1개월 후인 1968년 12월 23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송환했으나, 함정과 이 함정에 설치된 비밀전자장치를 몰수했다. 당시 동해함대사령관이던 현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에블로호는 원산항에 있다가 지난 1999년 10월 말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진 뒤 반미사상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http://nk.joins.com/article.asp) 참조.

군사화는 심각한 문제였다. 군사비 과다지출과 '인민경제활동'의 정지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체상태에 빠져 있던 경제기반 자체를 뒤흔들었다.

당시 북한 군부는 김일성 직계의 만주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수령에 대한 충성도 절대적이었다. 김일성은 군에 대한 신임을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 하여 전체 인민의 깊은 사랑과 다함 없는 존경"을 받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51] 하지만 김창봉과 허봉학 등은 이에 편승하여 군사 부문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대남 모험을 감행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수령의 군대로서의 군의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당시 수령제의 확립 과정에서 김일성의 권위에 대항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은 비대화된 군부뿐이었다. 좌편향과 강화일로에 있는 군부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이 사건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후계체제와 맞물려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군부의 세력화 가능성의 싹을 없애는 측면도 고려된 조치였다.

'당검열 그루빠'가 1968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집단군, 군단, 사단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어 철저한 검열을 실시하면서 '군부 강경파 사건'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검열 결과 당간부화 정책의 파괴, 전국 요새화의 반대, 낭비, 군벌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52] 이에 대해 1969년 1월 '조선인민군 제4기 제4차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1967년 이후 재차 숙청의 회오리가 몰아쳤다.[53]

---

51)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 경축 연회에서 한 연설, 1968. 2. 8.), 『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쪽.

52) "인민군 제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1969. 1. 6~1. 14), 중앙정보부 편, 『북괴군사전략자료집』(서울 : 중앙정보부, 1974), 327~332쪽.

김창봉, 허봉학, 부총참모장 김철만, 해군사령관 유창권, 제7집단군 사령관 김양춘, 특수정찰국장 김정태, 제3집단군 사령관 정병갑, 총참모장 최광[54]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숙청되었다. 이후 사건 수습을 위한 강습 과정에서 부수상 김광협, 사회안전상 석산 등 고위관리들도 실각했다. 이들은 모두 만주파였으며, 대부분 동북항일연군 제2로군 계열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숙청의 명분은 당정책 불이행과 군벌관료주의화였다. 심지어 이들에게는 푸에블로호를 격침시키지 않고 나포한 것에 대해서도 수정주의 사상 때문이라고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55] 숙청 이후 민족보위상에 최현, 총참모장에 오진우, 총정치국장에 한익수, 그리고 대남담당 비서에 김중린이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숙청을 계기로 당에 의한 군 장악 조치가 보다 강력하게 진행되었다. 군내 당조직 강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회보다 더 강력한 당조직의 건설이 요구되었다. 김일성은 "사단, 련대에다가 정치위원제를 둔다.

---

53) 당시 이 사건은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로동신문』이 이례적으로 당 군사노선의 정당성이나 군민 일치의 관계를 강조하는 기사를 몇 차례 게재했을 뿐이다. 이 정도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 『로동신문』, 1968년 12월 4일. 군민관계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1969년 1월 29일, 2월 3일, 2월 8일 등 참조. 또 군고위인사들의 주요 행사 불참 확인을 통해 군 내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음을 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의 결론 연설문이 알려지면서 숙청의 전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결론 전문은 "인민군 제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1969. 1. 6~1. 14), 327~341쪽.

54) 최광은 복권되어 1977년 4월 행정직인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을 맡으면서 재기했다. 1980년 제6차 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복권을 이루었다. 1988년 2월 오극렬(吳克烈)에 이어 인민군 총참모장에 재기용됨으로써 19년 만에 완전한 군 복권이 실현되었다. '군부의 부도옹(不倒翁)'이란 별명도 이 때 얻은 것이다. 이후 1990년 5월 노동당 정치국 위원에 선출되고, 1995년 10월 오진우(吳振宇)에 이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고, 원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1997년 2월 사망 당시 직책은 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군사위원 등으로서 북한 군부의 제2인자였다. 김용현, "북한엘리트 연구 1 : 사라진 엘리트, 떠오르는 엘리트", 『통일한국』 4월호(1997), 94~98쪽.

55) "인민군 제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1969. 1. 6~1. 14), 330쪽.

이것은 당을 대표한다. … 금후 모든 명령서에는 군사 간부 혼자서 싸인하지 못하고 정치위원의 싸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군사간부에 대한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제시했다. 대대와 중대까지 정치지도원을 두는 조치도 동시에 취해졌다. 그리고 당조직지도부가 군내 당사업과 정치간부들을 통제하고, 당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이를 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사로청)의 강화가 결정되었다.[56] 이로써 군 정치 부문은 완전히 당에 귀속되었다.

이와 같은 숙청과 정치적 조치들을 통해 유일체제 구축의 물리적 조치들이 완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군에 대한 김일성 혁명전통의 강화, 수령체계의 확립 등으로 김일성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의 전환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는 기반이 되었다.

5. 맺음말

북한 체제의 전개과정에서 1960년대는 군사화의 정치적 틀이 만들어지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자기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된 중요한 시기였다. 이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계속되는 압박과 중소갈등, 그리고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또한 대내적으로 정치권력의 유지와 안정의 기제로서, 사회경제적 동원의 기제로서 군사화가 적극적으로 선택되었다. 여기서 군사화에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대내적인 것이었다. 1960년대 북한 사회의 정치·사

56) 위의 글, 334~335쪽.

회 · 경제적 불안정성은 군사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으며,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틀도 이 과정에서 구축되었다.

북한 체제의 최고지도부로서 만주파가 자기 완결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부터 1961년 4차 당대회를 전후로 한 시기였다. 종파사건이라는 정치적 격변의 여진 속에서, 1958년 초부터 군내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당뿐만 아니라 군도 만주파의 통제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만주파의 완벽한 군 통제를 위한 제도화, 즉 전군에 인민군당위원회와 로동당군사위원회의 설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군내에 민족주의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군내의 정치사업이 소련으로부터의 탈색과 이를 대체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국 당내 숙청과 군내 숙청 및 제도화를 통해 만주파 중심의 '당 · 군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경제 · 국방 병진 노선과, 경제 시스템의 군사적 방법으로의 확산을 통해 군사화가 진행되었다. 병진 노선의 등장은 한반도 차원의 긴장 심화와 사회주의권 분열이라는 1960년대 이중의 대외위기 상황이 가져다준 결과였다. 또 다른 배경에는 당 · 군 일체화를 이룬 만주파의 안정적 물적 토대의 확보와 그것의 재생산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병진 노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의 확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사상사업의 강화로, 사회적 측면에서 증산 · 절약운동의 강조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진'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은 실제 국방 분야로의 과도한 지출을 초래케 했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경제 발전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게 했다.

한편 1960년대 후반 갑산계 숙청 사건, '군부 강경파 사건' 등도 역설

적으로 정치의 군사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군의 위상이 수령의 군대로서 격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후 지속적인 군사화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사건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성에 대한 범만주파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상당한 정치사상투쟁을 동반한 것이었다. 특히 '군부 강경파 사건'은 극단적인 개인숭배 및 사회적 동원 질서의 구축과 남북관계의 팽팽한 긴장의 심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이는 북한 사회에서 극단적인 군사모험주의의 예봉이 꺾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의 군사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북한 체제의 군사화, 즉 군사주의적 사회구조의 형성은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주요한 자원이었다. 또한 이는 수령제 성립 과정과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었다. 수령제 완성을 위해 군사화가 도구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컸던 것이다. 극단적인 군사화를 통해 수령제 완성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판세력의 등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이를 기화로 내부의 강력한 군대식 통일단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내외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 북한의 위기상황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60년대의 군사화와 수령제를 1990년대의 군사국가화 및 국방위원장 체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의 군사화는 당·군관계에서 당의 우위 속에 위기돌파 자원으로, 또한 수령제 성립 과정에서의 군 활용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0년대의 군사화는 당과 군의 수평적 또는 군의 우위라는 관계 속에서 군 활용의 차원을 넘어 군사국가화, 즉 군사 부문이 사회 전체의 작동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차원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경제사전』, 제2권(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량환갑 엮음, 『전후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1).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지음, 『조선로동당략사』, 제2권, 1979년판(서울 : 돌베개, 1989).

국토통일원 편,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0).

김봉률,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원수 항일빨치산의 혁명적 애국전통을 계승한 군대", 『민주조선』, 1958년 1월 24일.

김을천, "장백 혁명근거지에서의 조국광복회 활동(1936. 5～1940. 8)", 『력사과학』, 제5권(1961).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 6개년(1971～1976) 계획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편,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2. 8.),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 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 3. 8.),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군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을 강화할 데 대

하여"(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58. 10. 30.),『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는 공산주의 학교이다"(조선인민군 제109군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1960. 8. 25.),『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인민군대 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 9. 8.),『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국토통일원 편,『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0).

_____,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 10. 5.),『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도, 시, 군 및 공장 당 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67. 3. 17～24.),『김일성 저작집』, 제2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스무돐 경축연회에서 한 연설, 1968. 2. 8.),『김일성 저작집』, 제2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중앙정보부 편, "인민군 제4기 4차 전원회의시의 김일성 결론 연설(1969. 1. 6～1. 14)",『북괴군사전략자료집』(서울 : 중앙정보부, 1974).

『조선중앙연감 1962』(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62).

"노숙하고 현명한 정치로 사회주의를 빛내여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로동신문』, 1998년 10월 19일.

"우리 당 군사로선의 정당성", 『로동신문』, 1968년 12월 4일.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
"정론 :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통신사의 성명", 『로동신문』, 1967년 1월 27일.

<2차 자료>
강만길 · 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6).
高瀨淨, 이남현 옮김, 『북한 경제입문』(서울 : 청년사, 1988).
오쿠무라 사토시(奧村 哲), 박선영 옮김,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 전쟁과 사회주의의 변주곡』(서울 : 소나무, 2001).
와다 하루키,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2).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서울 : 역사비평사, 1995).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 북한의 대중 · 소 관계를 중심으로』(서울 : 법문사, 1985).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문제연구소 엮음, 『북한인명사전』(서울 : 중앙일보사, 1990).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엮음, 『북한의 경제』(광주 : 광주, 1988).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김용현, "북한엘리트 연구 1 : 사라진 엘리트, 떠오르는 엘리트", 『통일한국』 4월호(1997).

_____, "북한 체제 군사화의 정치·사회적 기원 : 1990, 195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3권 1호(2001).

_____,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연구(1925~40) :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동향과 통일과정을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1956~64년) : Kaleckian CGE 모델 분석"(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이종석, "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 봄호(1995).

이태섭,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 1967~1982"(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차문석,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정책 : 소련·중국·북한의 생산성의 정치"(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高昇孝, 『現代朝鮮經濟入門』(東京 : 新泉社, 1989).

徐東晩,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 : 東京大學大學院總合文化研究科 國際關係論專攻 博士學位論文, 1995).

和田春樹, 『歷史としての社會主義』(東京 : 岩波書店, 1992).

http : //nk.joins.com/article.asp

<Abstract>

The Crisis and Milit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during the 1960's

Kim, Yong Hyun(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Political Science)

This study focuses on the milit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during the 1960s since this decade formed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seen in the 1990s. In addition, 1960s' North Korea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threat than in any other time. With the weakening of the Northern triple alliance there emerged the Southern triple alliance and concentration of power(*Suryong* political system) in North Korea. North Korea's labor-center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reached its peak, producing social and economic stress as by-products to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North Korea tried to address these problems through increased militarization of the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militarization process was used as a vehicle to achieve many goals. First, militarization represen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n-Ju* faction militia, identification of the party and military, and campaigns like the "National defense and economy proceeding together line" and "Four military lines". Also, North Korea's 1960s process of militarization was devised to help the state overcome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In this regard, it

help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ryong* political system, and as well, kept the anti-government movement from growing. Thus, wide ranging efforts were made to try to evade potential crisis during the 1960s. These efforts extended to various social and economic realms of society to protect political power and social/economic mobilization. Through militarizatio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nstabilities could be avoided. On the whole, the militarization process was instituted as a means to counter the internal and external threats to the system that North Korea faced during the turbulent 1960s.

Keywords : North Korea, militarization process, *Suryong* political system, *Man-Ju* faction, National defense and economy proceeding together line, Four military lines